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의견 제출

한나라당 주성영의원이 대표입법발의 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LPG업계(한국LPG가스공업협회, 판매협회, 대한LPG협회는) 건의문을 작성, 지식경제부, 지식경제위원회위원장·수석전문위원, 주성영의원실 등에 제출했다.

한국LPG가스공업협회

### 건의문

1. 그동안 LPG는 천연가스(LNG)공급이 어려운 중·소 규모의 도시 및 농·어촌지역, 도서지역 등의 서민(저소득층)들에게 LPG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등 국가에너지의 주요한 축을 형성해 왔습니다.
2. 그러나 정치적인 공약, 민원 등의 이유로 인해 LNG보급은 매년 확대 추세에 있으며, '08.12월 정부는 오는 2013년까지 전국 42개 지역 350만가구에 대하여 LNG도시가스를 3년 정도 앞당겨 조기 공급한다는 내용의「제9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동 사업이 완료되면, 도시가스 보급률은 78%(한나라당은 '15년까지 90%)로 확대되는 반면, LPG(프로판) 사용가구는 '15년까지 530만 가구(△72.6%)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됩니다.

#### ♣ 연도별 LPG 산업에 미치는 영향 (추정)

구분	2007	2013	2015	'07 - '15 감소계
LPG사용가구(가구)	730만	380만(△350만)	200만(△180만)	530만(72.6%)
가정/상업용 LPG수요(톤)	1,971	1,100(△871)	493(△607)	1,478(74.9%)
LPG 충전사업자 (개소)	213( '08)	131(△82)	59(△72)	154(72.3%)
LPG 판매사업자 (개소)	4,751	2,931(△1,820)	1,310(△1,621)	3,441(72.4%)

※ '13, '15년 수치는 자체 전망

3. 더욱이 LNG도시가스에 대한 정부의 편향된 정책적 지원으로 에너지간 가격 불균형을 불러와, 지난해 고유가로 인한 전체적인 에너지소비 감소에도 불구하고 유독 LNG도시가스 소비만 증가하는 기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미수금 5조원, 부채비율 451%, 30조원의 외화유출, 소비 6% 증가 등 문제 속출)
4. 이런 상황에서 도심외곽지역 및 저소득층의 저렴한 연료 사용이라는 이유를 들어 일정 조건을 갖춘 소비자가 가스공급을 요청할 경우 도시가스 사업자가 LNG공급을 거절할 수 없도록 법률로 강제하고, 국가가 그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지원해주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입법 발의( 09.5.11) 되었습니다.
5. 중장기적으로 LNG공급부족 및 가스OPEC 설립 등에 따른 LNG가격 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LNG를 공급할 경우, ▲국가에너지의 근간을 흔들고 ▲편향된 정부의 LNG지원에 따른 타 연료 역차별 ▲LNG수급 불안 ▲중복투자에 따른 자원낭비 ▲도시가스 법취지 위배 ▲LPG산업 붕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6. 이에 우리 LPG업계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안 중 제19조의3(가스공급기준 등), 제19조의4(보조 및 용자), 제51조(벌칙) 제6의2호 조항을 삭제해 줄 것과, 아울러 형평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경제성이 없는 지역에 LNG를 공급하는 방안보다 기존 LPG소비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의 정책적 지원을 건의드리오니 꼭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5.

붙 임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안 검토의견 1부. 끝.

대한 LPG 협회 회장	정진성
한국LPG가스판매협회중앙회 회장	박찬목
한국 LPG 가스공업협회 회장	유수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안 검토의견

1. 편향된 정부의 LNG지원 정책에 따른 역차별

■ 정부의 왜곡된 가격정책

○ '08년 국제유가 급등(연초 504원/m<sup>3</sup>에서 지난해말 900원/m<sup>3</sup>으로 약 80%정도 폭등)으로 LNG요금 인상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가격을 동결하고 적자액을 보전해줌 ⇒ 약 3,360억원

- 이로 인해 지난해 가스공사 미수금은 약 3조4천억원에 달했으며, 올해에도 3월초까지 추가로 약 8천억원의 미수금 발생(최근 5조원까지 증가)

- 가스공사 부채 : '08년말 기준 17조9천억원으로, 부채비율은 438%에 달함(자본금 4조1천억원) ⇒ '09.2말 451%로 증가

○ 이는 정부의 왜곡된 LNG가격 정책 때문으로, 소비자들에게 도시가스는 타 연료에 비해 무조건 싸다는 오해를 불러와 과소비만 부추김

- 실제로 지난해 고유가로 인해 모든 에너지 소비가 줄었으나, LNG 도시가스만 6.0% 증가함

- LNG는 100% 수입에 의존하는 연료로, 지난해 2,800만톤 수입, 200억 달러(약 30조원)의 외화가 해외로 유출됨

■ 일방적인 LNG지원에 따른 타연료와의 형평성 저해

○ LPG는 인상요인이 고스란히 가격에 반영되는 반면, 경쟁연료인 LNG는 정부의 가격통제와 지원으로, 연료간 공정한 경쟁여건이 조성되지 못하고 있으며, LNG에 대해서만 특혜가 제공되고 있음

- LNG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인 지원으로 LNG소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활여건이 열악한 LPG 등 타 연료 소비자가 역차별을 받고 있음

## 2. LPG산업 붕괴

- LPG의 지속적인 수요감소와 제9차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에 의한 LNG보급 확대로 수년 내 LPG산업 자체가 거의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 이번 도법 개정안 발의로 인해 모든 LPG산업 종사자들은 커다란 허탈감과 함께 지금까지 어려운 여건 하에서 국가에너지의 한 축을 담당해 왔다는 자부심을 송두리째 빼앗겨 사업의욕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임
- '13년까지 전국 가구수의 78%가 도시가스를 사용하게 될 예정이며, 나아가 6년후(한나라당 계획 '15년까지 90%로 확대)에는 대한민국 전 국민의 대부분이 특정연료(LNG)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금번 도법 개정안이 철회때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임
- 특정연료만을 지원하고 보급을 확대하는 것이 과연 국가적으로 바람직한 것인지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냉철하게 고민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 제9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에 따른 LPG수요 전망

(단위: 천톤)

구분	'07년	2013년	2015년
가정·산업용 수요	1,971	1,100	493
'07년 대비 증감량		△871	△1,478
증감율(%)		△44.2	△74.9

※ 자료: '07년 수요는 지식경제부, '13~'15는 도시가스 보급에 따른 추정치

## 3. LNG수요 증가에 따른 수급 불안

- LNG보급 확대에 의한 공급 부족이 우려되며, 부족한 물량확보를 위해 고가의 스팟물량 구입 증가로 외화낭비 및 소비자 피해(가격 상승)도 우려됨

### ♣ 국내 천연가스 수급상황

(단위: 만톤)

구분	2011년	2015년	2020년
수요	3,290	3,349	4,035
공급(기 확보물량)	2,806	2,242	1,819
추가확보 필요량(%)	△484(14.7%)	△1,108(33%)	△2,216(54.9%)

※ 자료: 이명규의원(한나라당) 한국가스공사 국정감사(08.10.21) 보도자료

※ 수요는 8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 기준, 공급은 기확보 및 계약연장(예정)분 포함

- 지경부, 제9차 장기 천연가스수급계획에서 '15년 이후 공급 부족 언급
  - '08.12.23 러시아(전 세계 가스매장량의 73%, 생산량의 42%차지) 주도로 GECCF(가스수출국포럼, 16개국) 발족으로 향후 국제 LNG가격 인상 및 수급불안 우려
    - ※ 푸틴 대통령, "값싼 천연가스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고 연설
- 또한, 최근 유럽의 가스공급 중단 사태에서 보듯이 하나의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질 경우 향후 에너지위기 대응능력이 현저히 떨어질 뿐만 아니라 가격 상승시 국가경제에도 큰 부담이 될 것임

#### 4. 중복투자에 따른 자원 및 세금 낭비

-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기존 LPG공급시설이 갖추어진 지역에 별도로 LNG공급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중복투자가 불가피하며, 경제성이 없는 지역에 대한 공급설비 설치로 도시가스사업자의 경영환경 악화 우려
- 정치적 논리로 인한 선심성 재정지원으로 국가 세금낭비 우려
- 경제성 없는 소비처에 LNG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공사비를 투자하는 것보다 차라리 기존 LPG소비자에게 LNG와의 가격차이 만큼 그냥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임

#### 5. 도시가스사업법 취지 위배

- 도시가스란 말 그대로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 지역에 저렴한 가격으로 연료를 공급하는 것이나, 경제성이 없는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까지 공급하겠다는 것은 도시가스사업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임